

기획특집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제주의 대응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승한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 및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인간다운 삶 보장 등에 역점을 두어 나눔과 상생의 사회정책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제주의 대응과제들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1. 들어가면서

우리사회가 고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부조화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해직 및 실업문제,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발생시키는데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왔다. 더구나 고용없는 성장은 일자리와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발시켜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나타난 국내외 환경변화(예,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 일부 선진국의 금융 및 재정위기, 새로운 정부 출범 등)는 사회정책 분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증가, 복지사각지대의 지속화,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정부는 이런 사회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 정책변화를 시도하여 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 와중에 제18대 대선에서 복지, 일자리 및 고용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 중요한 핵심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 공약들 가운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주요특성과 문제점을 천착하고자 한다. 끝으로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제주의 대응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사회복지 정책변화의 배경과 의미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 결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자본주의 초기부터 오늘날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아젠다를 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성장을 비약적으로 촉발시켜 왔지만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계층간 혹은 지역간 빈부격차 혹은 사회양극화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해 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바로 사회불평등이나 사회양극화를 가능한 최소화시켜 사회구성원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배제와 포섭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의 배제와 포섭 대상으로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

심과 비중은 각 국가가 걸어 온 역사적 발전 과정, 이념적 체제, 경제·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곤 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사회복지 발달 역사는 경제적 성장, 근대화, 서구화 그리고 법·제도화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구의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사회는 지난 40년 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성장과 분배문제가 항상 국정과제의 기본 기조로 작용해 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MB 정부를 포함한 과거 정부들은 불균형성장 전략에 바탕을 두어 국가·사회발전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국가·사회발전의 추동력이 성장 일변도의 접근과 전략 실천에 역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의 부를 일단 축적하고, 그 다음으로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한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분배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우리사회는 빈부격차, 지역불균형 발전, 그리고 사회양극화 문제를 만족할 정도로 해소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그 동안 국가의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인간으로써 혹은 국민으로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보호 혹은 최저 생계유지를 해주는 수준에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말부터 불어닥친 소외 IMF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기업도산,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이 발생하여 대량실직 및 실업,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새로운 빈곤층 양산과 중산층 붕괴가 사회복지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를 가져 왔다. 그 결과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10)이 시행되면서 기본적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전기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잔여적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재편화를 선도한 신자유주의경제체제(Neoliberal economy regime)의 팽배와 파급 영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재조직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세계적으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지역·계층간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가져 온 부작용(예, 정리해고,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 불안, 빈부격차 심화, 사회불안 등) 해결이 바로 복지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최 근년 EU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국내 경기의 장기적 침체 등으로 말미암아 경제·사회적 생활이 힘든 계층(예,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 등)들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우리사회의 당면 문제로 부각된 지 10여년이 되고 있지만 그 파급효과들이 여전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환경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동시에 정책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대응책들이 기대만큼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불만족이 확산되고,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복지정책 영역(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사회적 약자 등)에서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적·제도적 변화들이 상당히 진전을 보여 오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의 질적 변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혁신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시대적 과제이며 동시에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오는데 필요조건으로 인식된다.

III.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복지사업들을 추진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대상별, 지역별, 수혜 영역별, 재정규모별로 사회복지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내용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¹⁾

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저성장 및 지식기반 사회화, 사회통합의 약

1) 보건복지부가 2013년 3월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 :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복지」 내용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계획(pp. 12~38)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화를 우리나라의 주요 도전요인으로 전제하여 향후 10년간 사회통합적 복지 구축에 주력하고, 또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갈등에 대비하고,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복지정책의 비전은 ‘국민 100% 행복사회’로 정하였고, 목표는 ‘보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 안락하고 건강한 삶,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에 두고 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정책은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자 중심에 근거하여 각 정책 영역별 전략과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새 정부는 국가가 0~5세 보육을 책임지고 내실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아보육은 보편적 복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0~5세 보육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보육료 지원 단가의 현실화,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에 향후 5년간 총 2,175개소 신규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더구나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새 정부는 임신·출산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취약 아동 돌봄서비스에 내실화를 기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방과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기초수급가정 아동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제교육 후원자 멘토링 등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의 사후처방보다는 예방과 인권보호에 더욱 주력하고, 동시에 요보호아동 및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새 정부는 보건·복지분야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였고, 주요 국정과제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그리고 창조경제 성장동력인 보건산업 육성 강화에 두고 있다. 사실상 일자리와 복지문제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선진 복지국가들도 근로연계형 복지(work-

to-welfare) 패러다임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범부처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및 제공방식 효율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그리고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률(가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민간·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동시에 사회복지 종사자와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새 정부는 해외환자유치 및 한국의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3)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새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과 연금제도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도 정부는 치매 및 요양 필요 노인보호 확대, 노인의료 지원체계 강화,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노후생활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료-요양-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일자리 추가 확충, 일자리 다양화, 그리고 노후설계교육시행 및 (가칭)노후설계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4)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별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급여체계를 개편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 별도 선정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지원도 통합, 연

계·지원하여 수혜 대상자의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2013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새 정부는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와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현실화와 빈곤위험계층 보호의 법적 차상위 기준 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유인 및 근로연계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정책적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복지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칭)「내일행복지원단」을 시범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빈곤의 예방과 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법(안)」을 2014년에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 체감도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새 정부는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려고 한다. 특히 국가가 장애인의 포괄적 지원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정하여 관련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상시 돌봄체계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5)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새 정부는 의료이용 및 비급여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예방적 보건 의료체계 미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미흡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핵심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선거 공약에 제시되었으나 수정되어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국가 부담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4대 중증질환 등 중기(2014~18) 보장성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특히 본인부담 제도개선을 통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새 정부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발병에 따른 치료보다는 예방에 건강관리 정책 방향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담배·술 등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검진」 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한 4대 중독문제(흡연, 알코올, 인터넷, 마약 등)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 (가칭)「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2013년 7월에 제정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동네 의원 간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사회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응급환자 발생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간 (특히 대도시와 농어촌) 의료공급체계의 불균형으로 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보건의료의 지속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건강보험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보건의료 자원(공공의료인력, 간호인력 등)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 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여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러한 정책은 별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새 정부는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들을 복지 수혜자 혹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접근과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중산층이 더욱 늘어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함께 누리는 사회통합을 달성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기도 한다. 왜냐하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을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째, 국가 혹은 지역차원에서 성장과 분배정책 패러다임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비록 보건의료 혹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성장에 기여한다고 하여도 사회복지 전반은 역시 분배정책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분배정책에 대한 국정기조와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복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2014년부터 4년간 105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러한 막대한 재정 조달을 위해서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종교인 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 등 기존 조세제도 안에서 년 간 14억 2천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작은 편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여지가 작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증세없이 기존 조세제도 틀 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여건 상 지방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지방비의 추가적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복지재정의 확충, 법과 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은 기존 정책과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복지정책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역점을 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 수요자 중심 혹은 맞춤형 복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다 철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새 정부가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제대로 살리고 그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려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복지 관련 정책(예컨대, 산업, 교육, 주거, 노동, 문화, 환경 등)들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은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정책기획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수립이 하향식(Top-down)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과 통합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개연성이 존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상이한 특성(예, 지방정부의 예산, 인적자원, 지역적 복지환경,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시민사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특성별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이룩해야 할 것이다.

IV. 향후 제주의 대응과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는 고용·복지·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여 구체적 정책수립을 통한 정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복지분야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재정 규모를 괄목할만하게 증가시켰다. 그래서 새 정부는 다양한 복지분야에 따른 전략과 국정과제들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실천하려는 강한 정책적 의욕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능동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과거 정부 하에서 추진되어 왔거나 혹은 현재 추진되는 각 분야별 복지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들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은 재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대응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국정과제들은 제주와 무관하지 않고 유관 적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제주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정책의 기대효과와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면 우선 현단계 제주지역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일차적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지역수준에서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복지정책 영역(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지역의 복지정책 환경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실제로 복지수혜 대상자의 체감도를 제고하여 더 나아가 도민 및 제주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제주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이 구축되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²⁾ 그러므로 제

2)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복지정책의 질적 변화와 복지 체감도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2012)를 참고할 것.

주형 복지전달체계가 잘 구축되어 운영이 잘 될 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넷째,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려면 막대한 복지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수준에서 복지재정을 어떻게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복지예산이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있을 것이고, 한편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제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복지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지역사회 민간복지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 부문(특히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서 복지수혜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를 둘러싼 직·간접의 다양한 복지자원(예, 복지기관, 단체, 시설, 봉사단체, 종사자 등)들과의 긴밀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는데 예산 확보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성, 적절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복지정책의 영역별로 정책 달성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실현은 정책집행의 실무를 맡고 있는 복지공무원 그리고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일차적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그 실효성을 거두려면 복지전달체계의 하위 단위에서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획기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복지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JDI**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2013),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복지 - 주요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계획」
-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1. 16), 「신 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